

관세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본격 추진

-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지원,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⑤내수기업 경영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월)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평균 내수소비 성장률 : ('96) 9.1% → ('20) 1.2% // 국내총생산(GDP) 중 내수 비중 50% 미만

○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공무직 75명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안내 중

○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둘째,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한다.

-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케이(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케이(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 10.29.~11.30.)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셋째,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을 높인다.

-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넷째,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신규 공장을 기준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케이(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 (현행) 수입원재료 입항전 사용신고 → 보세공장 반입 → 외주작업장 반입
-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 덤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 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케이(K)-푸드 수출 확대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 *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21종, 1,245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
- ** (현행) 해체작업 완료 후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시점까지 해체 고철 장기간 보관, 조선소 저장시설 활용 제한, 보관비용 증가 및 재활용 투입 지연 등 문제
-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간 카페리선(GNLST) 정기 운항에 따른 CIQ·국제여객터미널 재정비

⑤ 다섯째,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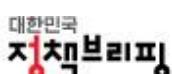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 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 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①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우편물 활용 수출 지원 ②수출품목 HSK제공, ③해외통관 정보 제공 등

-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 대책

담당 부서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천정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정용훈 (042-481-7811)



불임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 대책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



2025. 10. 13.

관 세 청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추진방향 2

III . 세부 지원방안 3

1.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선진국 구현 · 5

2.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외소비 국내전환 유도 5

3.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구매력 제고와 소비 여력 확대 · 6

4. 관세행정 규제혁신으로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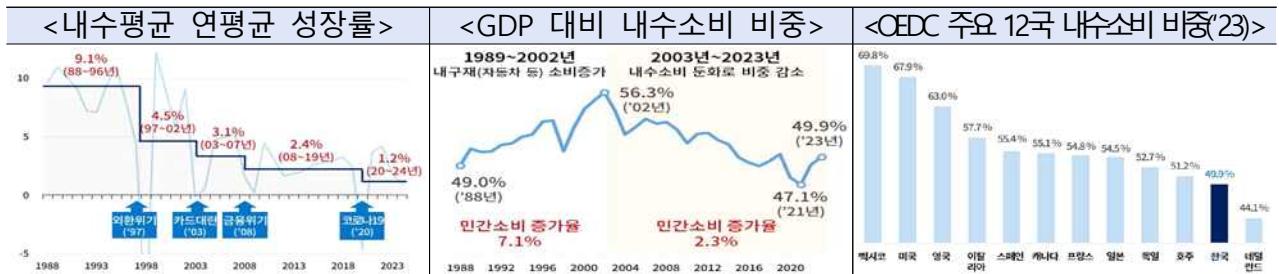
5.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한 국내 생산·소비 촉진 11

IV . 추진일정 12

□ [내수 경기] 우리나라의 평균 내수 소비 성장률은 '96년 9.1%를 기록한 후 지속 하락하여 '20년 1.2%까지 추락

-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56.3% 기록 후 현재까지 50% 미만 수준*

* '23년 기준 경제규모 1조달러를 넘는 OECD 12개 국가 중에서 11위로 낮은 수준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중장기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25.3)

□ [위기] 미국 관세정책,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해외직구) 증가 및 고물가 지속으로 국내 투자·소비 위축 등 내수 여력 약화

- (美관세) 인상된 관세율의 일부를 수출기업이 분담하거나 현지 생산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 마진 축소, 국내 투자·고용 감소 우려

* 철강업계, 관세·전기료 부담에 해외생산 '잰걸음'(서울경제, '25.9.2)

- (해외직구 증가*) 국내 동종업계와 경쟁 심화, 국내 소비 위축

* 전자상거래 수입건수(천건) : 96,125('22) → 131,447('23) → 181,187('24) → 108,279('25.7)

- (고물가) '25.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來 최고치(2.2%) 기록하는 등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감소

□ [기회] K-관광·방산·조선 등 국내 투자·소비 활성화 유인 증가

- (관광) 코로나 종식 이후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큰폭으로 증가 중

* 외국인 입국자(천명) : 2,193('20)→566('21) → 2,849('22) → 10,745('23) → 15,905('24)

- (방산·조선) 러-우 전쟁 계기 국내 방산물품 수요 증가, MASGA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국내에서 美군함 수리(MRO)

⇒ 통관제도 규제혁신·관세행정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내 투자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내수진작 지원 필요

목표

내수활성화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건설

5대 전략

19개 중점 추진 과제

전략 1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 ① 방한 외국인 여행자 통관정보 제공 강화
- ② 여행자 출입국 편의 제고
- ③ 수화물 수취 편의 제고
- ④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전략 2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외소비
국내 전환 유도**

- ① 면세점 확대 및 K-컨텐츠 체험존 마련
- ② 면세품 판매 방식 개선 및 할인행사 개최
- ③ 면세품 현장인도 요건 완화

전략 3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 제고와
소비 여력 확대**

- ①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통관·물류비용 최소화
- ②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및 매점매석 차단
- ③ 원산지 둔갑 및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 ④ 수입물가 및 물가안정품목 통관현황 공개

전략 4

**관세행정 규제혁신으로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 ① (수도·중부권) 바이오·항공기MRO·반도체 산업 지원
- ② (동남권) K-조선·석유 블랜딩·북극항로 거점 조성 지원
- ③ (대구·경북권) 철강산업·TK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지원
- ④ (서남권) K-푸드 수출 확대·RE100 순환경제 활성화
- ⑤ (강원·제주) 국제무역항 물류 및 관광 활성화

전략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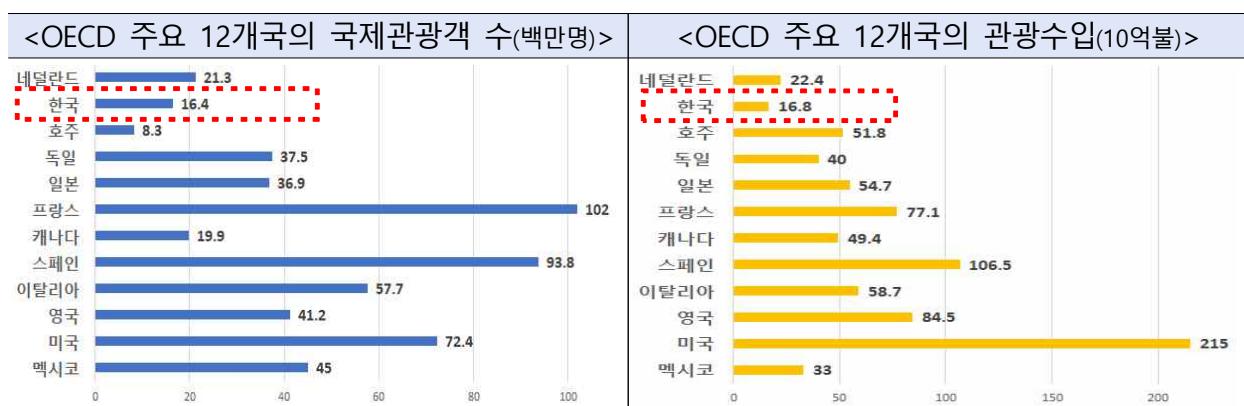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한
국내 생산·소비
촉진**

- ① 국내기업 세정지원 확대
- ② 해외 불법 자금유출 차단·국내 해외직구 피해 예방
- ③ 중소·영세업체 역직구 활성화 지원

전략 1.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 현황

- ‘24년 전세계 국제 관광객 수는 약 14억7천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99% 수준까지 회복, 관광수입은 1조7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
 - *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세계관광지표('24)
 -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관광객 16백만명, 관광수입 170억불 수준으로 OECD 주요 12개국 중 호주 다음으로 낮음



⇒ K-문화 확산 등으로 방한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입출국시 통관서비스 확대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지원

* 외국인 입국자(천명) : 2,193('20)→566('21) → 2,849('22) → 10,745('23) → 15,905('24)

□ 추진 방안

① [통관정보 제공 강화] 그린캡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정 구성원(75명)이 6개 공항만*에서 녹색 모자·유니폼을 착용하고 외국인에게 세관검사, 휴대품 유치, 외국환 신고 등 안내**
 - *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인천·평택항 //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
 - 입국자 국적 비율,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확대

② [출입국 편의 제고] 편리한 여행과 공항 혼잡 분산을 위해 이지드랍 서비스(빈손여행)와 전용 출국통로 이용 확대(국토부 등 협의)

- (이지드랍서비스) 공항 외 수하물 수속 서비스*로,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과정을 시내 거점 등으로 옮겨 빈손 여행을 실현

* 1단계 출국 시 이지드랍(시내 거점에서 수속) → 2단계 출국 시 홈드랍(숙소 등에서 수속) → 3단계 출입국(양방향) 시 홈투홈(출발국 숙소 등에서 수속 및 도착국 숙소로 배송) 등 확대 추진

- (전용 출국통로) 교통약자, 사회기여자,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외에 인천공항 이지드랍서비스 이용객도 전용 출국통로 이용 허용('25.6.27)

③ [수하물 수취 편의 제고] 모바일로 기탁 수하물 도착정보를 제공, 교통약자 대상으로 짐찾기 도움 서비스 확대

- (수하물 도착정보 제공)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기탁 수하물이 인천 공항에 정상 도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세관이 기탁수하물 X-ray 판독을 위해 인식한 수하물 번호와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수하물 정보를 매칭하여 인천공항공사에서 여행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도착 정보 제공

- (짐찾기 도움) 장애인·임산부·고령자·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위탁수하물 픽업·배송 서비스 제공*

* (최초) 휠체어 이용 장애인 → (현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13세 미만 어린이,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및 이들이 포함된 동반가족 전체

<참고: 교통약자 짐찾기 도움 서비스 설명 >

- ▶ (개요) 인천공항 입국 교통약자(장애인 등)의 위탁수하물을 대신 픽업하고, 통관 절차 시 고객과 동행하여 운반 후 최종 목적지로 배송해주는 유료 서비스
 - ▶ (특례) 통관규정 상 여행자휴대품의 대리운반은 허용되지 않으나, 산업부 규제 특례('22.11. ~ '26.11.)로 시범사업자 서비스 운영 중

④ [지역 관광 촉진]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시 지방 명소 방문을 인증* 하는 경우 면세점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외국인의 지역 관광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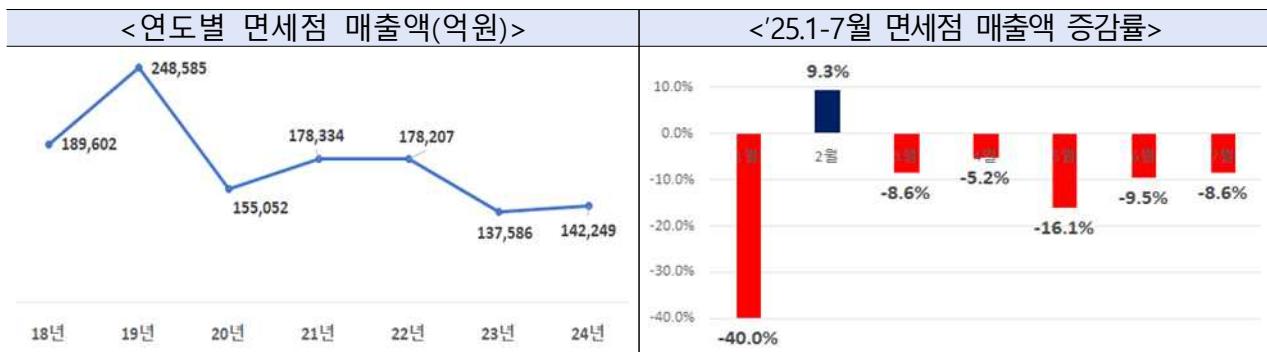
* 역사탐방 스탬프 투어,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 제시(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전략 2.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해외소비 국내 전환 유도

□ 현황

- 면세점 업계 불황으로 매출액 지속 감소

* (매출액) '19년 24조8천억원 → '24년 14조2천억원, 43% 감소



- 면세산업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혜택을 받으며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수 소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분야임

⇒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외래 관광객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여 내수 소비 증진 지원

□ 추진 방안

① (관광객 유치) 면세점 확대 및 면세점 방문자 편의 제고

- (면세점 확대) 명동, 전주 등 주요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
- (고객 편의) 관광객이 면세점에 방문, 머물고 싶도록 유휴공간에 K-화장법, 전통놀이 체험 등 「K-콘텐츠 체험존」 마련

* 통과율(Pass-by rate)은 낮추고, 유입율(Inflow)과 머뭄율(Stay) 높여 매출 유도

< K-콘텐츠 체험존 예시 >



② [면세쇼핑 촉진] 판매 방식 개선 및 대규모 할인행사 실시

- (맞춤 판매) 체험형 관광 트렌드를 반영, 고객 체험 후 주문·제작 판매(한복, 향수 등)를 할 수 있도록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도입
- (할인행사) 전국단위 면세점 할인행사('Korea Duty-Free Festa') 개최*, 한류 행사와 연계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사은품 진행

* (상반기)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단오절 기간 등 ('25.4.27~6.28)

(하반기) 산업부 후원 코리아세일페스타, 한류행사와 연계('25.10.29 ~ 11.30)

③ [물품 인도 절차 간소화] 면세품 현장인도 요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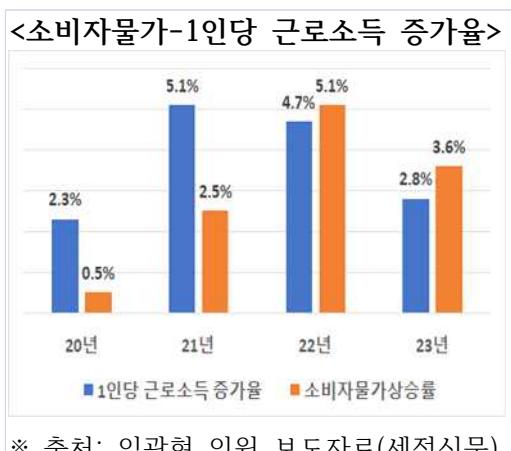
- (현장인도 확대) 외국 관광객이 입국 전·후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
* 이동 중에 면세점 이용 가능, 일반 매장에 비해 공항 텍스리펀드 절차가 없어 시간 활용 유리
- (스마트 인도) 면세품 구매 시 활용 중인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면세품 인도장에서 물품 인도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면세점에 여권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QR 생성)하면 여권 제시 불필요

전략 3.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 제고와 소비 여력 확대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 발표(9.1)

□ 현황

- 물가 상승률 > 근로소득 증가율인 경우, 실질소득 감소로 구매력 저하
 - '21년부터 높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증가율은 하락
- ⇒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구매력 제고 필요



□ 추진 방안

① [통관물류비 절감]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관세·물류비 최소화

- (관세 절감) 보세가공품 생산업체가 유리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및 적용요건 완화**

* (보세공장)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기한 확대, (자유무역지역) 혼용비율·원료과세방법 도입

** 1國 多협정 수입물품의 최저 세율 분석·공개, 비원산지와 혼합·운송 LNG에 특혜관세 허용

- (물류비 절감) 세관검사 비용을 국가가 보전, 컨테이너 검색 완료 화물을 부두(CY)로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도록 절차 개선

② [물가안정품목 통관관리] 신속통관 및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차단

- (신속통관) 할당관세품목·신속화 보세구역* 반입물품은 반입 후 30일 내에 수입신고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수입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35개)

- (매점매석) 수입신고수리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되도록 순찰강화,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과 협력 제재 강화

③ [부정유통 차단] 원산지 국산 둔갑 및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 (원산지 단속) 수입농산물 품명·원산지 허위 기재, 원산지 기준 불충족 국내생산품의 시중유통 또는 공공기관 부정납품 엄단

-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우범화물 선별 고도화, 적재지검사 강화 등을 통해 구리 스크랩 등 수급 불안정 중요자원의 밀수출 차단

④ [수급현황 공개] 수입물가 및 물가안정품목 통관 현황 공개

- (수입 물가) 물가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 수입물가모니터링 강화 및 가격상승 우려품목 관계부처 제공

- (유통 정보) 국민들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반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품목 통관 현황 월별 공개(품명·반출량 등)

전략 4. 관세행정 규제혁신으로 지역별 균형발전 5극3특 도모

※ <5극3특>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수도·중부·호남·대경·동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누어 각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 현황

- 정부는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성장”을 위하여,
 -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추진
- ⇒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소비-투자-고용-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기획재정부('25.8.22)

□ 추진 방안 : 5극 3특 균형성장 지원

- ① 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 [수도·중부권]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원

- (바이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보세 공장 확장·신축 등 지원

*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와 남동산단을 연계하여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조성 중



- (항공기 MRO)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 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MRO 항공기는 수입승인 면제 추진(FTZ법 개정)

*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항공기 개조→국외반출신고 (잔존물은 별도 수출입 또는 폐기)



- (반도체) 기업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여러 지역에 보세공장 설립 시 보세건설 단계부터 대표 세관에서 특허·관리

* 용인시 처인구에 SK 하이닉스(126만평 규모, 120조원), 삼성전자 등 약 50개 업체 입주 예정이며, SK하이닉스는 '27년 첫 가동 후 '46년까지 공장 4기를 순차 건설 예정



-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보세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세공장에 포함*
- * (현행) 수입신고 후 사용

② [동남권]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 육성

- (K-조선) 외주작업이 빈번한 K-조선이 수입 원재료를 입항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수입 원재료 입항전 사용신고 → 보세공장 반입 → 외주작업장 반입

- (석유 블렌딩) 오일탱크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 블렌딩 목적의 국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블렌딩 탱크)에 직반입 허용*

* (현행) 중량 측정 등을 위해 빈 탱크에 우선 적입 후 블렌딩 탱크로 재이송

- 블렌딩 원재료인 외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 간 선박·차량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제공 생략

* (예) 여수항 종합보세구역 보관 석유제품을 울산항 종합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 (북극항로) 가덕도 신공항이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물처리 시설·인력 등 효율적인 통관물류 인프라 구축

* 항만-공항-철도가 연결된 육해공 복합물류시스템으로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

- 입출항 선박 증가에 대비,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적재하는 물품이 선사 등 타인 소유 물품인 경우에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보관 허용

* (현행) 자가용 보세창고는 자기가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만 보관

③ [대경권] 중국산 후판 우회수입 차단,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지원

- (우회수입 대응)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을 수입신고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선별, 통관단계 서류심사 및 검사 강화
 - * 국내 산업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청-무역위원회 MOU체결(9.12)
 - ⇒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조사자료, 수입동향 등 반덤핑 조사에 관한 정보공유(제3조②)
- (수출비용 절감) 철강재를 선박에 적재한 상태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 * (기준) 수출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제품을 야적장에 장기보관함에 따라 품질저하, 선적지연, 물류비용(운송료·체선료) 증가 등 어려움 존재
- (물류거점 조성) TK 통합 신공항으로의 물동량 이전·확대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공항세관 신설·인력·통관장비 등 인프라 확충

④ [서남권] 전북·광주·전남 K-푸드 수출 확대, RE-100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 (K-푸드) 활방어·붕장어·소고기 등 유관기관이 원산지를 확인, 인증한 농축수산물에 대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 지정^{*} 추진
 - * 농축수산물 등의 FTA 활용·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 21종, 1,245개 품목 지정 운영중
- (순환경제^{RE100} 거점) 2천톤 미만의 소형 선박도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 활성화 지원
 - * (현행) 해체작업 완료 후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시점까지 해체 고철 장기간 보관, 조선소 저장시설 활용 제한, 보관비용 증가 및 재활용 투입 지연 등 문제
 -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목포 신항으로 반입되는 터빈 등 대형 기자재의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 지원

⑤ [강원제주권] 국제무역항 물류 및 관광 활성화

- (강원)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 육성, 양양공항 정상화*, 운항을 재개한 북방항로** 여객·물류 인프라 정비 지원
 - * 전세기(동남아, 몽골) 증편, 입출항·휴대품통관 원활화, 파라타항공 국제선 취항(예정)
 -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간 카페리선(GNLST) 정기 운항에 따른 CIQ·국제여객터미널 재정비
- (제주)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25.10.18, 주1회)에 따라 물품 하역, 통관·검사시설 신설 등 통관지원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 * 직접 수출 시, 1TEU 당 내륙 항만(광양항, 부산항 등)을 통한 수출 비용의 70% 절감
 -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에 카드수납·지갑형 휴대폰 케이스·가방·핸드백 장식용 키링 등을 추가하여 제주 관광객 유치 지원

전략 5.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한 국내 생산·소비 촉진

□ 현황

- 전 세계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의 급속한 성장으로 동종·유사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국내 업체와의 경쟁 심화
 - (전세계) '30년에는 약 7조 9,380억달러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기준 전체의 25%에 불과

* 수입(백만건) : 64('20)→181('24), 증183% // 수출(백만건) : 27('20)→61('24), 증126%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형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체계 연구(23.11월)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부정 무역 차단 및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지원

□ 추진 방안

① [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 강화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요건 완화 및 수출환급 지원

-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추징세액 기준금액(5천만원 이상) 폐지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 요건 완화*

* (기존)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입실적 필요 → (완화) 최근 1년간 수입실적 필요

- (수출환급 지원) 미환급업체 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 안내 및 자동환급, 환급신청 시 즉시 처리 등

② [내수 보호]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불법 해외자금 유출을 차단하고,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피해 최소화

- (자금유출 차단)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환치기를 통하여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는 행위 차단
- (해외직구 단속)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위조 상품 반입, 상용물품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졸업·입학, 가정의 달, 中 광군제, 美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대규모 할인 시기

③ [역직구 활성화] 중소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①신고체계 개선, ②수출 초보기업 지원, ③해외통관 환경 대응 등 10대 과제 추진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수출신고 체계 개선	①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 400만원 → 500만원
	②우편물 활용 수출 지원	▶ 우정본과 연계, 우편물 목록심사 시스템 구축 ▶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 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실적' 수혜 지원
	③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 60일 → 90일
	④수출목록 변환 신고 개선	▶ 주문번호로 수출신고필증 조회·발급 ▶ 목록변환수출 적재이행 신고 가능 업체 사전 등록* 프로세스 전산화 * (현행) 이메일 신청·접수→시스템 운영팀 요청 (개선) 전자통관시스템 신청·접수·처리
수출 초보 기업 지원	⑤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과태료 50% 경감
	⑥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통관 관련 정보 및 혜택 발굴·제공
	⑦수출 100품목 HSK 제공	▶ 목록통관 수출시 HSK 기재 편의 제고를 위해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작성·배포
해외통관 환경대응	⑧해외통관 정보 제공 등	▶ 해외 HS 분류, 통관시 유의사항 등 정보 제공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⑨일본 해상 수출 활성화	▶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 상담 센터 운영 등
	⑩해외 반품 물품 처리 간소화	▶ 여러 반품 물품을 취합하여 재수입할 수 있도록 '란별 금액' 기준으로 규제 완화* * (현행) 수입신고 총액 150\$ 이하 (개선) 신고 란별 150\$이하 (수입신고 1건당 총 999개란)

추 진 과 제		일정	담당부서
전략 1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통관정보 제공	1. Green Cap 서비스 확대	연중	관세국경감시과
출입국 편의	2. 이지드랍 서비스 제공	연중	관세국경감시과
	3. 전용 출국통로 이용대상 확대	완료(6월)	관세국경감시과
수화물 편의	4. 모바일 활용 수화물 도착정보 제공	12월	관세국경감시과
	5. 교통약자 대상 짐찾기 도움 서비스 제공	연중	통관물류정책과
지역 관광촉진	6. 외국인 관광객 지방명소 방문시 면세쿠폰 제공	'26.상	보세산업지원과
전략 2 해외소비 국내 전환을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객 유치	7. 면세점 신규 특허 및 재개장	12월	보세산업지원과
	8. K-컨텐츠 체험존 마련	12월	보세산업지원과
면세쇼핑 촉진	9.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도입	완료(9월)	보세산업지원과
	10. 'Korea Duty-Free Festa' 개최	10-11월	보세산업지원과
면세품 인도절차 간소화	11. 항공기 결·회항시 면세품 회수의무 면제	'26.상	보세산업지원과
	12.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대상 확대	'26.상	보세산업지원과
	13. 면세품 인도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 도입	완료(9월)	보세산업지원과
전략 3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 구매력 제고			
통관 물류비 절감	14. 보세공장 생산품 과세방법 선택기한 확대	12월	보세산업지원과
	16. 자유무역지역 생산품 원료과세 부과방식 도입	12월	보세산업지원과
	17. 1國 多협정물품 FTA세율 분석 공개	10월	FTA집행과
	18. 원산지/비원산지 혼합 LNG원산지 확인방법 시달	완료(5월)	FTA집행과
	19. 수입 검사비용 지원	연중	수출입안전검사과
	20. 컨테이너 검색화물 물류프로세스 개선	12월	수출입안전검사과
물가안정 품목 통관관리	21. 긴급통관물품 등 신속통관 지원	수시	통관물류정책과
	22. 할당관세품목 반출 관리를 위한 보세창고 순찰	연중	관세국경감시과
	23. 통관(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단속	9-11월	관세국경감시과
부정유통 차단	24. 국민생활밀접품목 단속	연중	공정무역심사팀
	25.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9-10월	조사총괄·공정무역
	26.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C/S개발, 적재지 검사 강화	9-10월	통관물류정책과
수급현황	27. 수입물가 공개대상 품목 확대	12월	데이터담당관

추진 과제		일정	담당부서
공개	28. 수입물가 모니터링 대상품목 조정·확대	12월	데이터담당관
	29. 할당관세품목 반출정보 공개	'26.3월	통관물류정책과

전략 4 내수 활성화 체질 개선을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수도· 중부권 성장지원	30. 바이오 특화단지 내 보세공장 확장·신축 지원	'26.상	보세산업지원과
	31. 항공기 개조 시 보세가공절차 활용 지원	'26.상	보세산업지원과
	32.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시 특허관리 세관 일원화	'26.상	보세산업지원과
	33. 반도체 연구개발 원자료·시제품 반출입절차 개선	'26.상	보세산업지원과
동남권 성장지원	34. K-조선 수입 원자료 반입절차 개선	12월	보세산업지원과
	35. 블렌딩 국산 석유제품 종합세구역 직반입 허용	12월	보세산업지원과
	36. 블렌딩 원자료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	12월	보세산업지원과
	37. 가덕도 신공항 통관물류 인프라 구축	'25-'29	통관물류정책과
	38. 선박용품 공급업체 자가용 보세창고 보관규정 완화	'26.상	통관물류정책과
대경권 성장지원	39. 중국산 후판 우회수입 차단	연중	수출입안전검사과
	40. 철강제 산상수출 신고 허용	완료(3월)	통관물류정책과
	41.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12월	통관물류정책과
	42. 대구경북(TK) 신공항 통관 인프라 확충	'25-'29	통관물류정책과
서남권 성장지원	43. 활방어·봉장어 등 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 확대	11월	FTA집행과
	44. 2천톤 미만 소형선박 수입신고 수리후 해체 허용	11월	통관물류정책과
	45.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기자재 통관지원	'26.상	통관물류정책과
강원· 제주권 성장지원	46.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 육성, 양양공항 정상화, 북방항로 운항 재개에 따른 인프라정비 지원	연중	통관물류정책과
	47. 제주-청도 신규항로 개설관련 통관 인프라 지원	연중	통관물류정책과
	48.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완료(8월)	보세산업지원과

전략 5 국내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기업 경영 지원

세정지원 확대	49. 중소기업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연중	심사정책과
	50. 미환급업체 환급금 찾아주기 등 수출환급 지원	연중	심사정책과
내수보호	51. 국내 자금 해외유출 불법행위 차단	12월	조사총괄과
	52. 국내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	12월	조사총괄과
역직구 활성화	53.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추진	'25-'26	전자상거래통관과